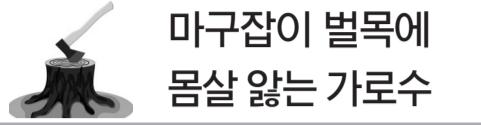


공사 우선에 '樹수방관'…벌목 남발에 '樹난시대'



〈상〉 이식 대신 투하면 잘라내

도심의 가로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 공기를 정화하고, 여름철 그늘을 제공하고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도시의 인프라로서 기후 위기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로수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지금까지도 도시개발, 공사 현장에서 "현실적인 이유"를 빌미로 주먹구구식으로 가로수를 벌목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생육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진단도 안 하고, 생태적 가치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벌목되는 광주 자체의 가로수 관리 실태와 도시숲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최근 5년간 벌목한 가로수가 1000그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500여그루는 도시개발, 공사 과정에서 "지하 시설에 뿌리가 얹혀 있어 뽑기 힘들다", "가로수 뿌리가 너무 커서 못 뽑겠다"는 등 개발 논리, 경제 논리에 맞춰 절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벌목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자체 담당자가 눈대중, 시공사 설명만 듣고 벌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집계한 가로수 관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광주시에서는 총 1032그루의 가로수가 벌목됐다.

이중 교통사고 등 파손, 관리 부실로 고사한 것을 제외하고 공사 과정 등에서 협의 하에 절려나간 나무는 503그루였다.

광주 자치구 5년간 1032그루 싹둑
공사 과정 잘려나간 것만 503그루
옮겨 심은 나무 점검·관리도 미흡
자치구 조례상으로는 이식 원칙
비용 문제에 작업현장 벌목 선호
베기 전 전문가 자문 의무화해야

서구는 공사 등 이유로 328그루를 벌목하며 가장 많은 나무를 잘라냈고, 북구 93그루, 동구 72그루, 광산구 5그루 등이었다. 남구는 고사목을 제거한 것 외에는 벌목으로 기록된 건 없었다.

최근 전남대에서도 지하 관로를 공사한다고 가로수를 15그루 벌목하는 등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가로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벌목된 나무는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기간 벌목하지 않고 '이식'한 가로수는 899그루로 집계됐다.

이식은 나무를 잘라내는 대신 뿌리체 굽착해 나무를 통째로 공원, 유류부지 등 녹지로 옮겨심고, 상황에 따라 공사 이후 재자리에 다시 옮겨심는 조치다.

북구는 411그루를 보자도 점용, 건축사업, 도로 공사 등을 사유로 이식했다. 광산구는 244그루, 남구 209그루, 동구 26그루 등이었으며 가장 많은 나무를 잘라낸 서구를 단 9그루를 이식하는 데 그쳤다.

다만 각 자치구는 이식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식 과정에서 하자보증기간 2년을 설정해 공사업체(시행사)로부터 현금을 예치받거나 하



최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예술대학 가로수길에 줄지어 있던 나무가 모두 베어진 채 밑동만 남아있다.

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로, 이후 생존 여부를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각 자치구 관계자들은 "조례상 원칙은 이식이지만, 현장 여건 등 현실적인 이유로 벌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자체는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와 각 자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가 생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을 경우에는 벌목 처분한다. 또 배수관·선

로 등 지하 매설물에 뿌리가 얹혀 있어 뿌리를 뽑아내기 힘들거나 이식 과정에서 재산·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벌목을 검토한다.

가로수 뿌리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밑동 지름의 4~5배 이상으로 넓게 퍼져 있을 경우, 아래 "이식을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벌목 처분한다.

나무의 흉고작경(가슴높이 둘레)이 작을수록 뿌리 활착률이 높아 이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큰나무일수록 더 많은 뿌리를 확보해야 해 이식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 각 자치구 담당자 설명이다.

하지만 벌목과 이식 여부를 결정할 때는 대부분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열기는커녕 비전문가인 자치구 담당자와 시공사의 육안 점검, 내부 검토만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조례상으로는 벌목에 앞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나무의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도시숲 등의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필수사항이 아닌 '권고事'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작업 현장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이식보다 벌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목을 할 때는 벌목 작업비와 임목 폐기물 운반비, 폐기물 처리비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식은 굴착(굴착) 작업비를 비롯해 가식장(임시로 심는 공간) 운반, 가식 비용, 가식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 공사 완료 후 재굴착비, 재운반·최종 쟁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식을 하면 벌목할 때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뿌리가 지하 매설물에 얹혀 있으면 공사시간과 비용,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벌목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로수를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함께, 벌목·이식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종태 나무의사는 "나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공사 때문에 인위적으로 베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작은 나무도 이식에 수백만 원이 들고 보호수는 1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수목 폐기물은 5t 차량에 실어 60~70만 원에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도 가로수를 베기 전 반드시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과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유가족들, 광주시에 정보 공개 청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유가족들이 광주시에 "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참사 유가족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광주대표도서관 사업정보와 수사 진행 경과 등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 협의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을 수호해야 할 광주시

는 벌주처로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듯 행정적·도의적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유족들을 외면하고 있으며, 시공 책임을 맡은 구일건설 역시 천하태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정보와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의 이유를 알아야 할 유족의 권리"라며 "참사의 진실은 유족과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광주시는 지난 12일 유가족들이 사고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한 데 대해 전면 공개 조치해야 한다"며 "또 사고방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 있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도 성명을 내고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광주시는 유족의 애타는 심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광주시, 노동부, 경찰, 시공사는 유족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자폐 학생 학대 혐의 초등교사 검찰 송치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중증 자폐 학생에게 폭언 등 아동학대(광주일보 12월 11일 6면)를 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자폐아동 A(12)군을 학대한 혐

의를 받은 40대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학교에서 A군에게 "야 이 X친새X야", "일어나 이 새X야" 등 육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학

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군의 스마트워치 녹음 앱에 기록된 3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B씨의 행위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만든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법원 양형위 하반기 과업으로 추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제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을 토대로 공정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제144차 양형위 전제회의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확정된다.

/연합뉴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한 사람의 보호법 전국민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NET>

알바 떴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National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한국국립암센터 Korea National Cancer Center

한국보건복지부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한국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한국손해보험협회 Korea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IGRAF 보험GA협회